

##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 2016년 정치전망과 야권의 과제

2016. 01. 18 | 손우정\_성공회대 연구교수 / 새사연 회원 | roots96@hanmail.net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 들어가며

안철수의 탈당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변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야권의 분열이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예고된 패배’로 귀결될 것만 같던 총선도 여전히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확언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 총선이 있는 2016년,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향해갈 것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의 주요 정치집단의 흐름을 짚어보고 정치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 정치세력의 현황과 전망

#### 1) 정부와 여당: 근본주의 정치의 지속성

이제 3년의 임기를 채워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의 정치는 한마디로 ‘근본주의적 동질성의 정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근본주의 세력은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동질성의 정치를 추구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 역시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화, 정당화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규범이 모호해지고 다원적 적대와 갈등이 산발적으로 분출되는 현대사회에서 동질성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

닌 ‘적에 대한 동일시’ 다. 이질적인 존재들은 구성된 ‘공통의 적’ 을 대상으로 적대가 ‘동일시’ 되면서 내부의 차이는 무화(無化)된 것처럼 만들어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대를 통한 동일시, 동일시를 통해 구성된 정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적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은 두말할 것 없이 ‘북한’ 이다. 이 ‘외부의 적’ 은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내부로 호출된다. 이른바 ‘내부의 적’ 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배제하고 섬멸해야할 내부의 적으로 호명된 이른바 ‘중북세력’ 은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확장되고 축소되는 ‘구성된 적’ 이다. 중북세력에 대한 적대론 매개로 이질적인 것들을 묶어낸 박근혜 정부의 동일성의 정치, 동일시 전략을 제외하고서는 지난 3년 간의 정치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전략과 차별화된 요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거대한 촛불항쟁에 부딪히면서 급하게 적대전략을 구성했으나 그 표적은 모호했다. 이명박 정부는 예상치 못한 촛불항쟁 앞에 ‘준비되지 않은 적대 전략’ 으로 급선회했던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을 겨냥했지만, 화살은 이명박 정권, 혹은 친이(親李)세력의 반대파 모두에게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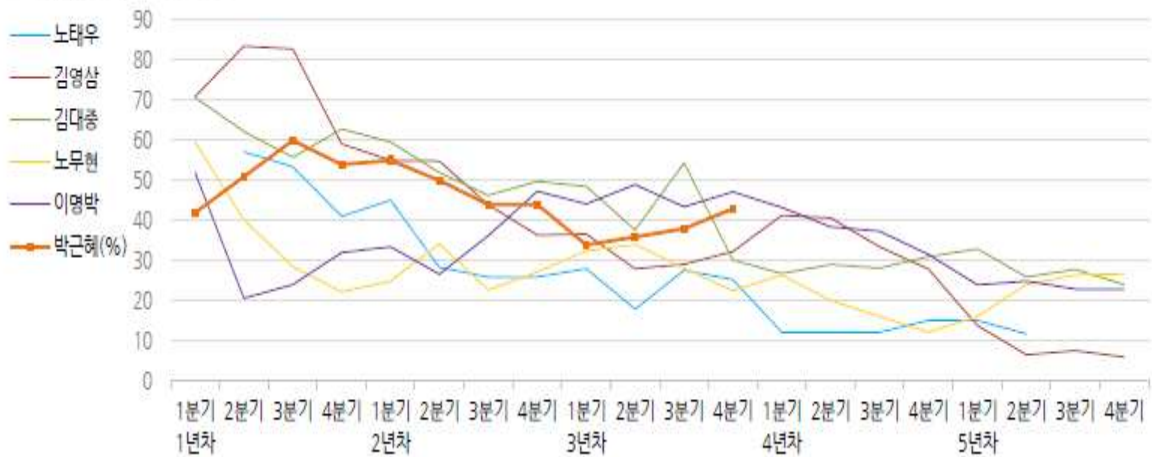
반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논란이 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소수세력을 대상으로 한 ‘내부의 적’ 을 구성함으로써 야권의 분열과 내적 갈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기 진영을 견고히 단결시켜 나가는 동일시 전략을 구사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후에는 적대 대상의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집권 초기의 불완전한 정치상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대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진영의 일부세력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급진세력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 접어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보듯이 두 개의 진영으로 구성된 적대 전략을 더욱 공고화했다. 재벌 친화적 경제정책, 노동개혁, 각종 공안 사건 등은 ‘적의 섬멸’ 이라는 목표 하에 합리화, 정당화되고 있고, 이런 정치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정치논리가 파시즘의 논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다원성과 이질성을 허용하지 않는 근본주의적 동일성의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해 내·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파시즘과 유사하다. 파시즘이 허구적 애국주의와 아래로부터의 강제적·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정치의 흐름을 평가하는 데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물론 ‘적’ 과 이들을 배제하고 섬멸해야할 주체로서의 자신을 대립시키는 전략은

양날의 칼이다. 이 전략은 자기 진영의 단결과 공고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상대 진영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일부세력에 대한 적대의 강도를 높여 내적 갈등과 이질성을 유발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통치 기반이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1.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



출처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1988년 이후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견고한 듯 보이는 지지율도 역대 정권과 비교해볼 때 크게 차별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그토록 견고한 것처럼 보일까? 다양한 이유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존재감 없는 야권의 모호한 역할이다.

## 2) 야권분열과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 가능성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정권 창출의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음에도 이를 근본주의적 정치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야권의 대응전략이 미친 영향이 크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49 : 51”로 고착된 대립구도로 해석하고, 2008년 촛불시위 당시의 좌클릭 전략에서 48%의 한계를 넘어설 중도화 전략으로 선회했다. 즉, 어차피 자신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진보블록보다 중도층, 혹은 보수층의 지지획득에 집중함으로써 진보화 전략의 제한성을 넘어설 수 있는 확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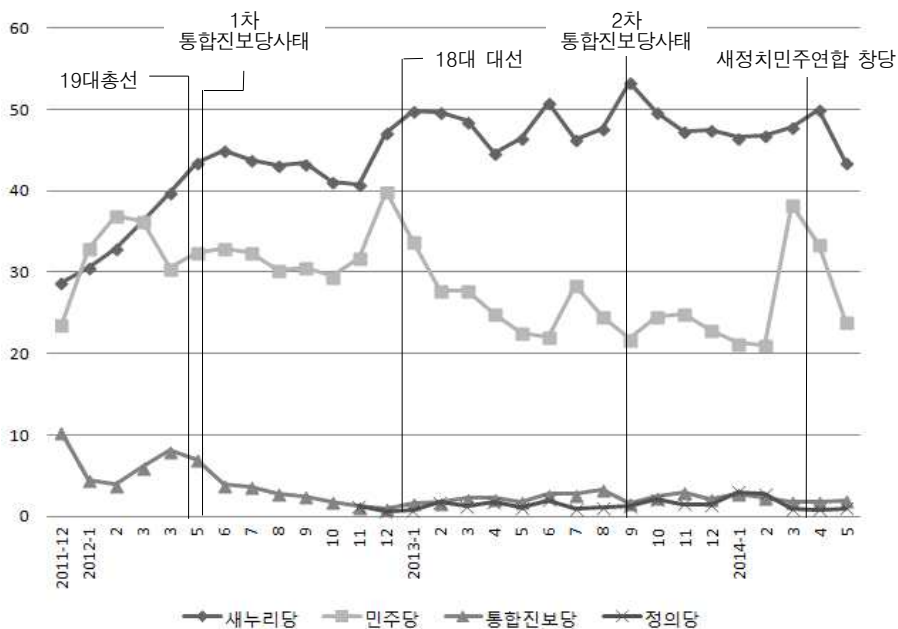
이 전략은 1997년 DJ의 ‘DJT연대’로 불리는 보수연합 전략으로 사용되어 적용했으며 2002년 노무현의 선거 전략 또한 선거 막판 정몽준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고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2012년 대선전략은 통합진보당 사태의 부정적 영향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긴 했지만, 1997년, 2002년 대선전략과는 다른 진보적 연대 전략, 즉 1992년 DJ의 대선 전략과 유사하다. 1992년 대선에서 전국 연합은 반(反)민자당 연합, 즉 민주대연합 노선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연합이었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92년 대선전략은 필패, 97년 대선 전략은 승리 전략으로 굳게 믿었다. 이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나 중북 논란, 세월호 참사, 정당 해산 등 정권의 근본주의 전략 앞에 시종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전략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여당의 치부를 공격하기보다 보수층, 혹은 중도층에게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 세력’으로 보이길 원했다.

그러나 2012년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가 “48%밖에”였는지, “48%이나”였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총선 직후 촛불시위가 확산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10%를 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지지율이 본격 상승된 것은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직후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지지율이 최고 정점에 올랐던 2012년 대선 직전에도 겨우 39.9%에 머물렀을 뿐이다(리얼미터 정례조사).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7.2%였다.

그림2. 정당 지지율 추이(2011.12~20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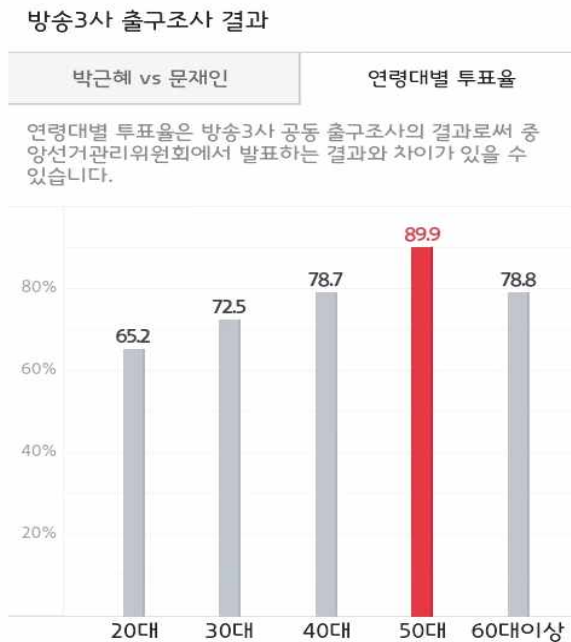
출처: 리얼미터 정례조사(유무선/RDD/ARS). 매월 첫째 주

\*\* 2011년 12월은 둘째 주. 2012년 3월은 첫째 주와 넷째 주 조사

이런 결과에 입각해 보면, 당시 문제인 후보가 얻었던 48%의 득표율 성격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진보적 연대 전략으로 48%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라기보다 “진보적 연대 전략으로 그나마 48%라도 얻었다” 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48%의 한계를 넘어설 보수화 전략으로의 선회에는 18대 대선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선 직후 진행된 각종 선거평가에서는 방송3사(KBS, SBS, MBC) 출구 결과 조사가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는데, 50대 투표율이 급상승해 8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2012년 18대 대선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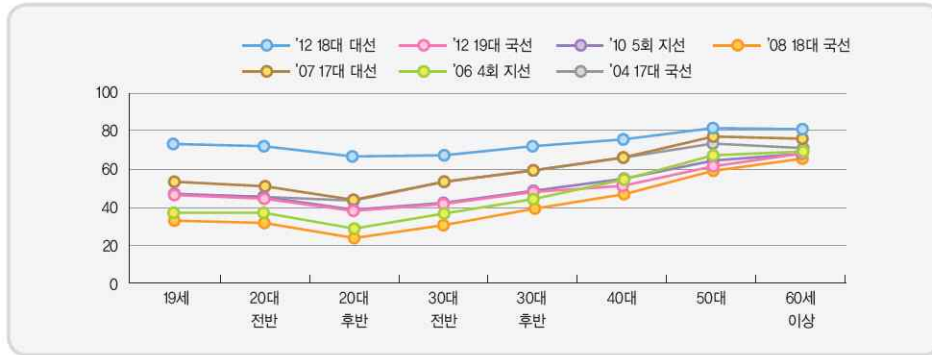


출처: KBS, SBS, MBC 출구조사 결과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나 진보적 공세전략이 보수층을 결집시켰다는 식의 해석이 넘쳐 났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48%의 한계를 넘어설 중도세력을 포용했다는 논리가 등장해 중도화·보수화 전략으로 회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출구조사 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50대 투표율은 82%로, 출구조사 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5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투표율이 높긴 하지만, 투표율 상승률은 오히려 가장 낮았다. 반면 20대 투표율은 과거에 비해 가장 눈부신 상승을 보였다.

그림3. 연령별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결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진보적 공세전략이 50대(보수층)를 결집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대(진보층)를 결집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민주당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이후에도 중도화·보수화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번 구축된 전략적 프레임은 뒤의 프레임 철저히 종속시켰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화·중도화 전략은 정말 ‘필승 전략’ 일까? 1997년 선거에서 DJ의 보수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여권의 분열이며, 둘째는 제도정치 영역에서 자신 외에는 대안세력이 부재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진세력의 측면효과(radical flank effects)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급진세력의 측면효과는 비교적 급진적인 세력이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지만, 그 공세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는 제도정치 영역에 존재하는 중도세력이 전유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1997년 대선국면을 복기해 보면 여권은 이 인제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었으며, 당시 시민사회의 급진적 역량은 국민승리21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DJ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건으로 학생운동이 직격탄을 맞은 후에도 1996년-1997년 노동계 총파업과 한보비리 사건 등으로 민중운동의 사회적 역량이 남아 있어 ‘측면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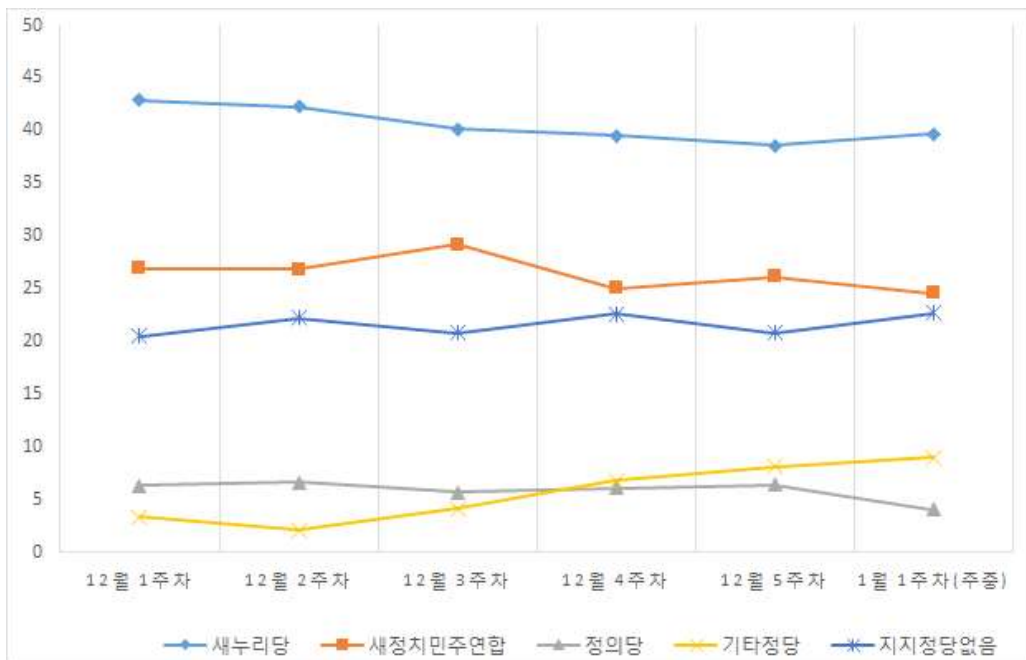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국면은 어떤가? 2012년 대선 이후 여권은 (아직) 분열되지 않았으며, 일련의 통합진보당 사태와 공안정국으로 인해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급진적 역량 자체가 심각하게 소진되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거대 야당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시종 모호한 온건화 전략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 확대는커녕 존재감조차 상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5년 12월 13일, 안철수의 탈당 선언은 이런 전략의 변화가능성을 감지하게 해

준다. 안철수를 필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쇄 탈당은 당내 계파적 실리 갈등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가치 차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 내에서 가치 논쟁이 의미 있게 전개된 바가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분당의 이유나 여전히 모호한 새정치의 내용이 아니라 야권 분열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다. 흥미롭게도 안철수 신당의 잠재적 확장력은 의외로 크다. 이것은 안철수 신당이 단지 야권의 분열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4. 정당지지율 추이(2015.12.~201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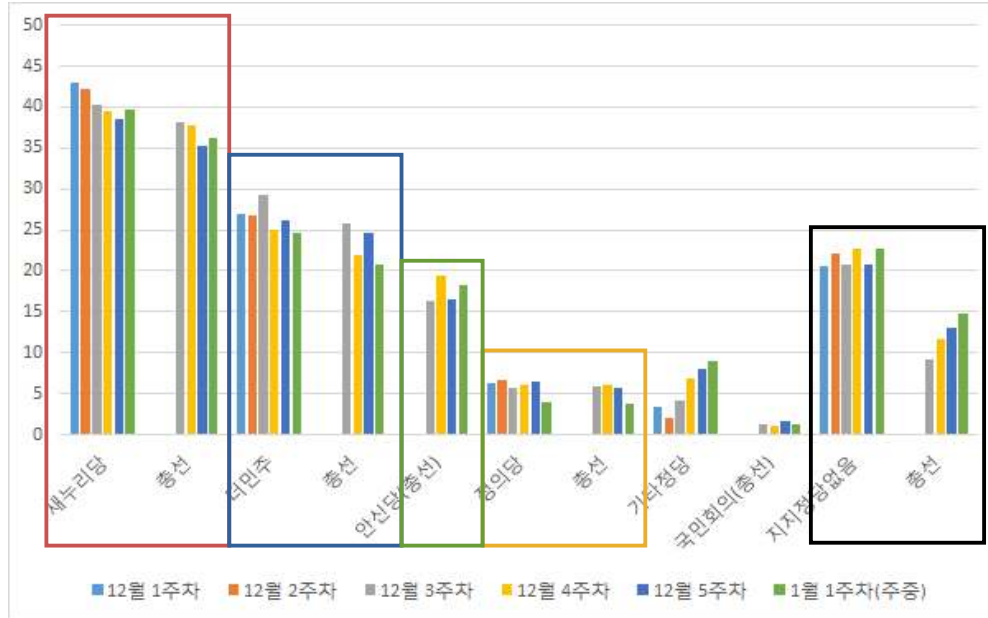


출처: 리얼미터 정례조사, 총선 지지정당 조사 결과 조합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1월 1주차는 주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선언이 진행된 이후, 지지층 결집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안철수 신당(현 국민의당)을 포함한 총선 지지 정당 조사 결과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정당에 포함시키면, 대략 17% 안팎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지지율이 어디에서 이동한 것이냐는 점이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지율은 무당층에서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모두에서 소폭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5. 정당지지율 추이 (총선 지지정당 조사 결과 조합)



출처: 리얼미터 정례조사, 총선 지지정당 조사 결과 조합

물론 새누리당의 지지율 감소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이라는 변수 외에도 한일 위안부 협상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는 정치 내용 상의 새로움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치 영역의 창출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 무당층의 상당부분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쏠렸다는 점, 친이계 일부 인사들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있는 점은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정치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단지 자기세력의 정치세력화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현 한국 정치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민주당 탈당 의원을 수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내의 합리적 보수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에 있다. 자잘한 내부 갈등에도 견고한 듯 보이는 새누리당 역시 어떤 계기를 통해 금세 균열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안철수 신당 세력이 총선 직전의 정치세력화와 기반 확대를 위해 더민주당 탈당 의원에만 의존하는 한, 총선 국면에서는 야권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선을 치루기 위한 세력화나, 정치지형의 재구성이나의 갈림길에 선 안철수 신당의 입장으로는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만일 안철수 신당이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하기보다 더민주당과의 경쟁구도에만 집착한다면 일정한 정치적 실리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어떤 의미에서건 새정치의 실험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더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중도화·보수화 전략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이동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합리적 보수’의 포지션을 주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낼 방법은 보다 선명한 야당노선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 국민의당은 2017년 대선에서 1997년 대선전략, 즉 온건화 전략에 기초한 대선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더민주당은 급진세력의 측면효과를 전유하기보다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2017년 19대 대선이 과연 1997년 15대 대선의 반복이 될지, 아니면 뼈아픈 분열로 패배했던 1987년 13대 대선의 반복이 될지, 우리는 과거의 오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3) 진보진영: 고립과 소멸, 혹은 재편?

일각에서는 진보의 더민주당, 중도의 국민의당, 보수의 새누리당 등 정치지형의 3분할적 구도를 진단하기도 하지만, 이 구도는 엄밀히 말해 진보-중도-보수의 영역 정립은 아니다. 한국 정치사의 특성 상, ‘진보’라는 개념이 주는 모호함은 유별나다.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역사발전의 진화론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을 둘러싼 패러다임적 구분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범주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주로 보편적 가치인 ‘민주화’나 ‘대북정책’ 등을 둘러싼 패러다임 대립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제도정치적 장 역시 극히 협소한 가치만을 대의해 왔다. 좀 더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한다면, 한국의 제도정치는 오랜 시간 ‘보수독점’의 체제였다고 볼 수 있으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의 3분할 구도 역시 광의의 보수진영 내부의 균열과 재정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지배적인 정치적 분할구조가 이렇게 짜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제가 상당부분 퇴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독점의 제도정치 체제에 균열을 낼 진보정치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와 뒤이은 정당 해산 이후, 기존 진보진영의 존재감과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제도정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정의당이 2015년 11월 22일 국민모임, 진보결집 더하기, 노동정치연대와 통합해 ‘통합정의당’으로 거듭났지만 진보정치를 둘러싼 토대가 많이 황폐해져 과거에 비해 지지율 확장성이 크지 않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과 더민주당의 새인물 영입전략, 비례대표 축소 등 악재가 겹쳐 틈새를 찾기 어려운 난제들도 가득 차 있다.

제도 영역 중심의 현실정치 노선을 선택한 정의당은 중요한 이슈마다 기성정치세

력과 차별화된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원외 정치동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지 못해 진보정치 전반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1월 민주노총이 선거연합당 추진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2월에도 권영국 변호사의 ‘시민혁명당 추진위원회’, 김원웅 전의원의 ‘민주통일정치포럼’ 등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 제안이 계속됐다. 민주노총과 전농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정당 방안 채택이 민주노총에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는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랫동안 원외 정당으로 존재하며 풀뿌리 정치를 일구어온 녹색당과 반복적인 이탈에도 정당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당도 있다. 녹색당은 기성정치는 물론, 기존의 진보정치와도 차별화된 풀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보편적 의제보다는 특화된 의제에만 집중하는 운동적 정당, 혹은 정당적 운동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로 인해 확장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소수 원외정당을 철저히 차별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제약과 언론의 철저한 외면도 극복해야 할 난제다. 가치적으로는 가장 미래 지향적 의제를 내재하고 있는 녹색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존재감을 드러내 제도정치 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일정한 성과를 드러내면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진보정치의 꾸준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이 가한 충격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이후의 사건과 어느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진보정치가 발 딛고 서야 할 토대의 황폐함은 계속 진행 중이다. 2015년 말, 연쇄적인 총궐기를 통해 여전히 운동역량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상균 위원장의 비자발적 자수(?)라는 치욕스런 상황에서 보인 진보블록의 역량은 초라했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보였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오늘날 진보정치, 진보운동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진보진영이 처한 현실은 제도정치 영역의 대안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그나마 ‘데모는 잘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의 범주에 이미 보수화 노선으로 회귀한 거대 야당을 제외한다면, 현재 전통적 진보정치 블록에서 일어난 변화는 크게 실리주의에 기초한 ‘현실정치 경향’ 과 전통적인 ‘운동정치 경향’ 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단지 진보 ‘정당’ 을 둘러싼 이원적 흐름만이 아니라 진보운동 블록 전반의 지향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미묘한 시각차이로 존재하지만, 대안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심화될수록 또 다른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근본주의적 정치전략이 지속될수록, 이미 현실정치 노선을 공식화한 정의당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표방하는 정치세력 간에 진보블록 내부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진보정치운동을 둘러싼 논쟁이 ‘진보세력’의 내부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당해산을 정점으로 한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를 되찾고, 단지 ‘진보세력’의 생존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 메시지와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새로운 시도 역시 여전히 내부 논쟁에 발목 잡혀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위한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정치적 영향력이 소진된 진보정치세력이 미래 의제에 대한 담론적 영향력마저 상실하고 있는 형국이다.


연대나 각자도생이냐의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메시지’다. 그것이 현 정치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저항이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망이든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담론적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 과제가 해결되어야 여타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이 보일 것이다.

## 대선으로 가는 총선 길목에 선 한국 정치, 자신의 존재 이유 드러내야

18대 대선 이후 나타난 급격한 우경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과 반동은 무력한 야당의 관조 속에 성큼성큼 진행되어 왔다. 진보블록의 와해와 침체, 고립 속에 진행된 일련의 정치 과정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지향과 요구를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의 분화와 다양한 시도들은 ‘대의의 결핍’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표출되지 못한 요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력감만 감돌던 이제까지 상황에 비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총선의 해에 새롭게 정립될 정치지형이 보다 노골화된 파시즘적 체제로 향해갈지,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찾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표면적인 현상만을 두고 판단하자면, 19대 총선에서 140석(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을 얻었던 야권이 20대 총선에서 더욱 약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각에서는 개헌저지선조차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며, 야당이 몇 석을 지켜낼 것인가가 아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총선에서의 선전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근본주의적 적대 전략을 바탕으로 일방적 독주를 감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던 야권의 무력함이 계속 되는 한, 총선에서의 야권 승리가 절실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는 낫다는 소극적 지지는 가능하겠지만, 적극적인 국민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이번 총선 분위기는 마치 2008년 18대 총선 분위기와 유사하다.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뜨겁지 않고, 야권연대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다. 시민 사회의 총선 개입 시도도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못할뿐더러 대중적 호응도 없다. 이런 현상이, ‘거대 야당’의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활동의 성적표라면 지나친 평가일까? 140여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못한 일을, 100석 이상의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준다고 해낼 수 있을까?

따라서 야권이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아야 할 것은 몇몇 스타성 있는 인물의 영입이나 공천혁신, 후보조정, 권모술수가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의의 결핍’에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 흐르고 있는 대중 지형의 흐름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 지금의 분열과 난맥상은 그래서 차라리 계기에 가깝다. 야권이 이 계기를 살려 자신의 존재 의미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파시즘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무력감을 반복할 것인가? 남아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총선·대선의 ‘성적’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 질문 앞에 놓여 있다. 

## 2016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12일	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1월 15일	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1월 18일	정치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 2016년 정치전망과 야권의 과제	손우정
1월 21일	농업	추후 공개	추후 공개
1월 22일	주거	추후 공개	추후 공개
1월 25일	돌봄	추후 공개	추후 공개
1월 28일	의료복지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일	청년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4일	경제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8일	미디어	추후 공개	추후 공개
2월 11일	종합	추후 공개	추후 공개